

보도해명자료 (13. 11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제2의 원전 비리'? 광해관리공단의 '먹이사슬'

1. 보도내용 (13.11.4, 주간조선 01면)

□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입찰비리

- 지난 5년간 입찰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헐세가 공단과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들간 나눠먹기 식으로 사용됨
-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평가시스템과 유착관계로 인해 거액의 예산이 눈먼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셈

□ 광해방지사업비

- 정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총 1조 1,316억원의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, 관련업체의 부담금 등을 투입하고 있음

□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

- 지난해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산 57곳에 대해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오염조사에서 39개 광산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광해관리공단의 입찰비리 관련

- 지난 10.1(화) 검찰이 광해관리공단 본사·충청지사를 압수수색하고 광해방지사업 입찰관련 사항에 대해 수사중이므로,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가능할 전망

- 산업부는 검찰수사 결과 입찰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,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임

□ 광해방지사업 입찰투명성 관련

- 검찰 수사결과가 진행중이므로 광해관리공단의 입찰제도가 공정성·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평가시스템과 유착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예단을 내리기 보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

□ 광해방지사업비

- 따라서, 보도내용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07~2016년간 총 1조 1,3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,
 - 또한, 2007년~2013년간 광해방지기본계획상 사업비는 7,534억원이나, 집행된 사업비는 5,616억원 수준임

□ 광해관리공단 사업의 실효성 문제

- '12년 환경부의 사후환경오염조사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휴·폐광산지역을 조사하여야 하나, 광해방지사업 미 실시 지역 조사 결과도 포함하여 발표한 바,
 - 산업부는 광해방지사업 평가의 객관성·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계 기관 회의 등을 통해 환경부에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박병찬 과 장 (02-2110-5490)
성길웅 사무관 (02-2110-5497)